



오리스킨을 활용한 고품질 오리유 제품화

오리 부산물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은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사업을 바탕으로 오리 가공과정에서 폐기되는 부산물인 ‘오리스킨을 활용한 고품질 오리유 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오리 뼈에 붙어있는 오리스킨은 정육 상품화와 제품생산과정에서 폐기되고 있으며 이는 연간 약 295.7톤 수준으로 관련 오리 가공기업에서는 매년 약 5000만 원의 폐기물 처리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오리 산업 규모가 점차 확대되면서 오리 가공에 따른 부산물 또한 증가하고 있으나 오리 부산물에 대한 국내 산업적 활용은 전무한 실정이다. 오리스킨은 대부분이 폐기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사업 주관연구기관 (주)팜덕 연구진은 폐기되는 부산물인 오리스킨을 정제유로 가공해 불포화지방산이 높고 혈관 노화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고품질 오리유를 제품화했다.

국내에서는 주로 포장육과 가공육의 형태로 오리를 섭취하지만, 미국, 유럽, 호주 등 해외에서는 오리고기 외에도 다수의 오리유 제품과 오리유로 튀긴 감자칩 등의 식품이 판매되고 있다.

연구팀은 오리유가 우지, 돈지 등 타 동물성기름보다 포화지방산 대비 불포화지방산의 함량이 높고 특히 동맥 경화 예방 효과 등을 가지고 있는 올레인산이 다량 함유돼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팜덕 관계자는 “불포화지방산 함량이 높은 고품질의 오리유를 활용한 가공식품과 기능성 상품을 출시할 경우 큰 산업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기술을 적용한 ‘진오리유’는 오리유 소비가 높은 호주와 뉴질랜드로 80톤 이상의 수출을 계획 중이며 일본의 셀프우동 전문점과 연 120톤 규모의 수출을 협의 중이다.

<농수축산신문>

왕겨·쌀겨 순환자원 인정, 폐기물 제외



벼를 도정할 때 벗겨지는 껍질인 왕겨와 쌀겨가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았다.

환경부에 따르면 왕겨(벼 낱알의 큰 껍질)와 쌀겨(현미의 작은 껍질)는 9월 1일부터 순환자원으로 쉽게 인정된다. 왕겨·쌀겨의 자원 가치를 확인한 환경부 적극행정위원회는 6개월 이상 걸리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정비를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이러한 변화가 적용되도록 했다.

순환자원으로 인정받는 왕겨·쌀겨는 연간 생산실적만 확인되면 폐기물 관련 규제가 사라진다. 폐기물일 땐 사료·비료 정도로 재활용 범위가 제한되어 있었지만, 폐기물에서 벗어나면 소각·매립만 하지 않으면 어떤 용도로도 쓸 수 있다. 또한, 전용 수집·운반 차량을 가진 유통업자뿐 아니라 누구나 거래에 나설 수 있다.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왕겨와 쌀겨는 매년 각각 약 80만t, 약 40만t씩 발생한다. 축사 깔개, 철강 보온재, 사료, 퇴비, 화장품 첨가제 등 다양한 용도로 다시 쓰일 수 있다. 자원 활용도가 높아 그냥 버려지거나 방치되는 물량은 거의 없다고 한다. 재활용 시장에서 왕겨는 t당 5만원, 쌀겨는 t당 20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그런데 농민들은 왕겨·쌀겨가 폐기물로 규정돼 오히려 재활용을 저해한다고 지적해왔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왕겨·쌀겨의 순환자원 인정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데 나선 것이다.

9월 1일부터 왕겨·쌀겨 생산자는 폐기물배출자 신고 서류가 없어도 지방환경청에 순환자원 인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순환자원 심사 절차 중 공정·설비 검사, 유해물질 함유량 분석 등 서류 제출도 면제된다. 최소한의 서류 심사와 현장 육안 검사만 받으면 된다.

〈중앙일보〉



위기의 축산업, 벼랑 끝 외출 타기 중

축산업 생존을 위한 공동 비상대책위 구성

축산업계가 비상이다. 축산업을 옥죄고 있는 각종 환경규제 비롯해, 사료값 인상, 가금업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칼날 등으로 인해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축산업계를 둘러싸고 진행되고 있는 각종 규제를 비롯해 이에 대응해 나가는 축산업계의 노력을 정리해 봤다.



1 축단협, '축산업 생존 위한 공동 비대위' 구성 축산업계 공동 현안 해결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승호)는 지난 6월 22일 대표자회의를 열고, 축산업계 공동 현안 해결을 위해 축단협·축협조합장협의회·축산관련학회협의회가 공동 참여하는 '축산업 생존을 위한 공동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축산업비대위')를 구성·운영키로 했다.

지난 4월 축단협은 환경부문 규제 강화를 비롯한 대체단백질 시장 확대 등 축산업계 공동 현안 대응을 위해 분과별 T/F 구성을 의결한 바 있는 가운데 범축산업계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와 축산관련 학계가 함께 참여하는 '축산업비대위'를 설치, 현안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비대위는 ▲축산발전과제 대선공약 채택, ▲대체단백질 관련 범축산업계 대응방안 강구, ▲근본적인 축산업 환경규제 해결(탄소중립, 양분관리제 등)을 목표로 두고 대표자 및 실무자기구를 운영키로 하였다.

비대위 대표는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승호)와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회장 이상문), 축산관련학회협의회(회장 진동일)가 공동 대표를 맡았다.



2 축산업 외면하는 농정 물가 명목 농업외면, 축산농가들 분노 축단협, 김현수 장관 사퇴 촉구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승호)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며 강력 연대 투쟁을 예고했다.

축단협은 김현수 장관이 올바른 농정수립과 축산농가의 생존권대책은 마련하지 않은 채 물가안정이라는 전리품을 챙기기 위해 농민들을 강도 높게 핍박하고 있다며 지난 24일 성명을 통해 농축산분야 8대 사퇴 사유를 밝혔다.

먼저 축단협은 김현수 장관이 산란계농장 살처분농가에 대한 입식지원이 제대로 하지 않고 계란 수입에만 앞장서고 있다고 밝혔다. 수입계란에는 항공기 물류지원·선별포장비 지원·할당관세 적용(27%→0%) 등 국민혈세를 투입한 반면, 산란계농장에는 발생책임을 물어 보상금삭감·지급시기 지연 등을 통해 입식을 전면적으로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공정위가 2017년부터 가금육시장(생산자협회·사업자)에 대한 전방위 조사를 진행하고 조만간 수천억대의 과징금을 부과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축산단체에서는 김현수 장관에게 부처 의견을 공정위에 제시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지금까지 이를 묵살하고 있다는 것이 축산단체의 설명이다.

이 밖에도 1000억 규모의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이 내년부터 지방재정으로 이관될 방침이지만 김현수 장관은 국무조정실에 어떠한 의견도 제시하지 않고 사태해결에 나서지 않고 있는 점도 이유로 꼽았다.

더불어 ▲2022년도 농축산분야 예산확보 ▲국방부 군급식 경쟁입찰 도입 ▲식약처의 소비기한표시제 도입 ▲가축분뇨법 및 악취방지법 개정 추진(국회, 환경부) ▲고용노동부의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 기준 강화 ▲학교급식 채식의무화를 비롯한 관계부처의 축산관련정책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는 등 오히려 축산농가에 대한 규제강화에 앞장서고 있다고 분노했다.

〈출처: 한국농업신문〉